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토론문

손은일 교수(한국국제대학교)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추진하였지만, 정부에 따라 집중도와 실효성에서의 차이와 한계를 드러냄.

이는 前정부의 정책계승을 거부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5년마다 특별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는 등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희석되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변화도 우려되는 부분임.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수도권집중의 가속화 등 불평등이 심화됨.

이러한 행태를 종합하면 균형발전정책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 인가 라는 염려.

## ○지역불평등의 심화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을 하는 현재까지도 인구, 경제, 권력 등의 수도권 집중은 팩트임.

문제는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우려되는 것은 권력이나 기회를 비롯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의 집중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은 머리이고, 지방은 손발이라는 이야기에 해당함. 수도권은 스스로 연구하고 기획하지만 지

방은 단지 실행만 함.

결국,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

여기서 하나의 고민은 지방분권과의 관계설정임. 자력갱생이 힘든 지방에서 지방분권만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화를 만들어야 함.

##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몽니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생성되고 있음은 우려됨. 그나마 남아 있는 실질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대기업 투자와 대학의 설립 정도임.

사실, ‘지방을 떠나는 지방대학’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음. 충남 홍성의 청운대가 인천 도화지구 제2캠퍼스 개교, 중부대는 경기 고양캠퍼스, 을지대는 의정부캠퍼스, 동양대와 침례신학대는 동두천 캠퍼스 조성을 각각 추진중. 이는 지방에 있으면 미래가 없어 보이는 대학인데, 수도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임.

문제는 지역의 대학이 이전하거나 몰락하면 지역경제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고, 지방에서의 대학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이 같은 현상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구조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수도권규제완화가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됨.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는

지방분권이 타당한데, 자력갱생이 취약한 지방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요구됨.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은 다소 흐

려진 면이 있지만 내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에 비하여 더 진전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엇박자로 인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세대에서는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두면서 지방분권을 활성화시켜야 함. 균형발전은 컨텐츠이고 지방분권을 수단이므로 이들의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입법권 보장 등 현재 논의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인구감소, 지방재정위기 등을 고려하면 균형발전정책의 틀을 ‘발전’ 보다는 ‘지속가능성’이나 ‘대안문명’ 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구상.

○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국가균형발전 성과확산 학술심포지움’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균형발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도 제안.